

“윤여철 노무총괄 부회장 체제, 끝장내야 할 재벌적폐”

현대기아차그룹사 2017년 임단협 미타결...17일 전면파업-전 조합원 양재동 진격투쟁

무술년 2018년이 밝았지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부분이 2017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6일 서울 중구 정동 조합 회의실에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2차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사 2017년 임단협 미타결사업장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사 2017년 단체교섭이 미타결 근본 원인이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의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상대로 미타결 사업장 공동투쟁 전개 ▲1월 10일까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을 시, 1월 16일 각 사업장별 4시간 이상 파업 전개 ▲1월 17일 전면파업과 전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 전개 ▲1월 17일 이후 미타결 각 사업장별 4시간 이상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해가 넘도록 2017년 임단협을 미타결로 몰아간 장본인으로 윤여철 그룹사 노무총괄 부회장을 지목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계열사 대표자들이 윤여철 부회장의 눈치를 보고, 현대차 단체교섭만 쳐다보는 허수아비로 전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윤여철 부회장이 직접



교섭 나설 것 ▲그룹 본사의 일방통행식 노무가이드라인 폐지와 각 사업장별 교섭 자율권 보장,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윤여철 노무총괄 부회장의 일방통행식 노무관리는 단체교섭 간섭이 그치지 않는다. 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들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판결결과 미이행 ▲근무형태변경 합의서 무시한 사측의 일방 잔업 중단과 특근중단 ▲정년퇴직자와 자연감소자 자리에 신규인원 투입토록 한 단체협약 미이행 등 노사협의, 단협, 합의서에 따라 이행해야할 합의를 윤여철 부회장의 눈치와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조의 파업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지난 12월 27일 현대차지부 임단협 교섭 파행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말까지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노사관계 불안정을 전면에 세우고 뒤에 숨어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지배개입 ‘가이드라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한국전력 부지 10조원 고가

매입 박근혜 정권과 정치거래 의혹, 제3차 뇌물죄 ▲글로벌스와 현대모비스, 이노션 등 정몽구 정의선 부자 경영권 승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과 처벌 요구 등 재벌개혁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단체교섭은 사측의 현대차 눈치 보기와 임금 차별 제시로 해마다 파행을 겪고 있다. 현대로템과 현대케피코지회 사측 대표들은 현대차 단체교섭 결과를 의식하며 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임금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로 지급능력이 충분한 현대제철과 현대엠시트에서 지회들은 단체교섭 의견접근안을 부결시켰다. 전년보다 하락한 합의안과 현대차보다 먼저 타결해도 이로우 없다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하는 분석이 많다.